

# 당정 “수익 개선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연내 개정안 마련”

“국민연금처럼 운용, 수급권 보호”  
인허가 요건·기금운영체계 등 담겨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 단계적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영체계, 관리·감독도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확대에 맞춰서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왼쪽부터) 의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학영 의원,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인력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면서 “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계 대표사업자 및 노사단체가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과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 과제도 사회적협약체와 함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퇴직연금제

도 구조 개편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의 모두발언에서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토대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영세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준비 상황 및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와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쟁점 사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개정 노동조합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국힘, 의총서 ‘장동혁尹 절연 거부’ 충돌

의원들 “尹 절연 안하면 당 참패”  
장 대표, 여론 자료 제시하며 반박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고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이라고 제가 반문을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연 거부’에 대한 당내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다고 한다.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더 많았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는 지도부를 흔들어서는 안 되고, 단일대로 대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12·3 계엄, 내란, 탄핵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선거체제로 가자는 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체 개편이니 사퇴니 이견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과 관련된 보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절연 거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을 듣지 않으려 일부러 ‘김빠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오찬 일정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은희 의원은 의총장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건가. 누구를 위해서 의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은 “어제 당명 개정은 안하기로 한 것 아닌가. 1시간 넘게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만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뉴시스

## 김남국 전 비서관, 민주당 대변인 임명

“국민의 표현으로 당 메시지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을 23일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비서관 임명 사실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의 대변인 임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변인 추천은 저도, 당대표도 공감한 부분”이라며 “본인 여러 입장이 있을 텐데 당을 위해서 중요한 지선을 앞둔 시기에 대변인 제안에 대해 본인이 수락해준 점은 당이 고맙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 7인회’ 구성원으로,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



통비서관으로 합류했다가 지난해 12월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던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주고 받은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를 국민과 당원들께 쉽고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구윤철 “美 관세 15% 부과시 FTA국 유리” (경제부총리)

재경위 ‘관세 무효’ 관련 현안질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기에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 변경된 구조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질의에 “만약 (관세율이) 15% 올라가면 저희들은 FTA가 0%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관헌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계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세 무효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지난해 합의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을 이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파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측이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합의된 MOU는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그걸 지키려면 미국에서도 과다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보여진다”면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